

2018.12. 20. (목) 14:00 이후 보도 가능

2019년 국방부 업무보고

2018. 12. 20. (목)

국민과 함께 평화를 만드는 강한 국방



국 방 부



목 차



I. 핵심 국정과제 추진성과와 평가	1
II. 2019년 업무추진 여건 및 방향	5
III. 주요 업무 추진계획	
1. 2019년 역점추진 과제	
① 전방위 안보위협에 대비한 튼튼한 국방태세 확립	6
② 「9·19 군사합의」 적극 이행을 통한 남북 간 군사적 신뢰구축	8
③ 강력한 국방개혁 추진으로 한반도 평화를 뒷받침하는 강군건설	10
④ 굳건한 한미동맹 기반 하, 체계적·적극적 전작권 조기 전환 준비	14
⑤ 국민과 함께하고,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사기충천한 軍 문화 정착	16
2. 쟁점·갈등 과제	
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도입	18
3. 신규 발굴 과제	
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 적용, 스마트국방 혁신 추진	20
IV. 결 언	23
【붙임#1】 2019년, 이렇게 바꾸겠습니다.	

I. 핵심 국정과제 추진성과와 평가

확고한 국방태세를 유지한 가운데,
대통령님의 통수지침과 정부의 국정과제를 적극 추진,
‘강한안보’와 ‘책임국방’ 구현에 진력

통 수 지 침

-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정착 노력을 군사적으로 뒷받침
- 국방개혁 강력 추진 및 전작권 전환 준비 가속화
- 굳건한 한미동맹 기반 하 주변국과 국방협력 발전
- 민주사회의 군대로서,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국방운영체계 혁신

국정과제 (국방분야)

- 북핵 등 비대칭위협 대응능력 강화
- 굳건한 한미동맹 기반위에 전작권 조기전환
- 국방개혁 및 국방 문민화의 강력한 추진
- 방산비리 척결과 4차 산업혁명에 걸맞은 방위산업 육성
- 장병 인권 보장 및 복무여건의 획기적 개선

□ 한반도 평화정착을 힘으로 뒷받침하고, 국민안전을 보장

○ 귀순유도작전 (14회 24명) 성공적 수행 등 확고한 군사대비태세 유지

* '17. 5월 ~ 현재까지 육상 5회, 해상 9회 / 軍 5명, 민간인 19명

○ 한미 연합연습·훈련 조정, 北의 비핵화 여정 동참을 견인

* '18 KR / FE, UFG, KMEP (2건), Vigilant Ace 등

Korea Marine Exercise Program (한국 內 해병 전지훈련 프로그램)

○ ‘평화와 화합’의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 보장

* 軍 인력 5,196명, 물자·장비 31종 315점 지원, 육·해·공 완벽한 경계작전 수행

○ ‘9·19 군사합의’를 통해 남북 간 군사적 신뢰구축·긴장완화 토대 마련

△지상·해상·공중 적대행위 중지 △판문점 공동경비구역 (JSA) 비무장화
△DMZ 內 상호 감시초소 (각 11개) 철수 △공동유해발굴지역 지뢰제거·도로개설 등

○ 재외국민 보호 등 국민 안전을 위한 선제적·적극적 지원체계 확립

* 가나 해역 피랍국민 (3명) 호송, 사이판 고립 (태풍 위투) 국민 수송지원 (10회, 799명)

※ 국민의 자유롭고 평화로운 일상을 보장, 국민의 軍으로서 위상 정립

□ 국방개혁 2.0 계획 완성 및 추진기반 조성

군구조·국방운영·병영문화·방위사업 분야

- 「국방개혁 2.0 기본계획」 완성 (4개 분야 42개 개혁과제 선정)
 - 국방운영·병영문화·방위사업 분야 32개 과제 계획 수립 및 착수 (7.29.)
 - 전방위 위협에 대응 가능한 군구조 10개 과제 계획 보완·완성 (12월)
 - * 작전·전투조직 중심으로 국방인력구조 개편
 - * 한국군의 핵심군사능력 분석에 기초한 전력증강계획 보완
- 효율성·신뢰성·개방성 제고를 위한 국방운영 혁신 추진
 - △비전투분야 직위를 민간인력으로 전환 ('19년 4,736명 증원 확정)
 - △연도별 장군 정원 조정 (감축 : '18년 6명, '19. 1. 1.부 10명, '19년 말 15명)
 - △국방부 주요 직위 문민화('17년 6개 실·국장 직위, '18년 1개 국장 직위 민간공무원으로 대체)

□ 북핵 등 비대칭위협 대응능력 강화

- 강력한 군사력 건설을 뒷받침하기 위한 국방예산 증액
 - * '19년 국방예산 : '18년 대비 8.2% 증가 편성 (46조 6,971억 원)
- 北 핵·WMD 위협 대응 핵심전력(감시·정찰·탐지·요격 능력) 적기 전력화
 - * 軍정찰위성·해상초계기-II 사업 착수, 공중급유기 1호기 도입 등
- 효과적인 사이버 위협 대응을 위한 국방사이버안보 역량 강화
 - * 합참 중심의 '사이버 작전'으로 조직 개편 및 사이버작전수행체계 정립

□ 굳건한 한미동맹 기반위에 전작권 조기 전환을 위한 여건 조성

※ 제50차 SCM 합의결과

- 한반도 비핵화·평화정착을 위한 **美측 지지 확보**
 - △남북 군사분야 합의 공식 지지
 - △'19년 한미 연합연습 조정을 통한 北 비핵화 조치 건인 필요성 공감 등
- **전작권 전환**에 대한 한미 공동의 추진 의지 재확인
- **주요 전략문서에 한미가 합의**, 전작권 전환 가속화 여건 마련
 - * 전작권 전환 이후에도
 - △現 연합사와 유사한 체제 유지 (한국군 대장이 사령관)
 - △주한미군 주둔 △유엔사 유지 등
- **2019년 최초작전운용능력 (IOC) 평가 결정**

□ 국민 눈높이에 맞는 軍 적폐 청산

- 軍의 정치개입·민간인 사찰 근절을 위해 국군기무사 해편,
군사안보지원사령부 창설

△부대령에 '정치적 중립' 명시 △감찰실장에 검사 보직 △인력감축(30%) 등

- 사이버사령부의 '정치적 중립 의무화'

- * 사이버사령부 부대령에 '정치적 중립 의무' 규정 명문화
- * 정치댓글로 논란이 된 '사이버심리전' 기능 폐지

'17. 9. 25~'18. 2. 28 (5개월), 10개 권고의제 - 28개 중과제 - 69개 세부과제 이행을 권고

- 「군 적폐청산위원회」 운영, 권고안 이행 中

- * 軍 정치개입 근절, 장병 인권침해 근절, 軍 성폭력 근절 등

- 범정부 차원의 '5·18 민주화운동 진상조사' 적극 지원

- * 헬기 사격, 전투기 출격대기, 성폭력 사건 등
- * 5·18 민주화운동 당시 軍의 잘못된 행위에 대한 대국민 사과(11.7. 장관)를
통해 '국민의 군대'로 인식 전환

□ 장병 복무여건의 획기적 개선 및 인권보장 제도화

- 병 복무기간 단축 시행

- * 육군·해병대 : 21 → 18개월, 해군 : 23 → 20개월, 공군 : 24 → 22개월
(공군은 병역법 개정으로 1개월 추가 단축 추진)
- * '18. 10. 1. 전역자부터 '21. 12. 14. 전역자까지 2주 단위로 1일씩 단계적 단축

- 장병 복무여건 개선 및 복지 증진

적립한도 상향(20 → 40만원), 금리 우대(5% 이상)

- 병 봉급 인상('17년 대비 87.8%), 장병내일준비적금 시행
- 사망·부상 장병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(재해보상·치료여건 현실화)
 - * 공상간부 민간병원 이용 시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담금 지급('18. 2. 28.)
 - * 공상병사는 전역 보류 후 완치 시까지 軍에서 치료가능토록 추진(병역법 개정 중)

- 병 사적운용 근절 및 병영문화 개선으로 장병 인권보장

- * 일과 이후 병 휴대폰 사용 및 평일외출 시범 적용 中(최적안 마련 예정)
- * 공관병 제도 폐지(198명 편제 삭제), 軍 전용승용차 운용 개선(765 → 345대, 420대 삭감)
- * 국방부 양성평등위원회 운용, 軍 사법제도 개혁 등

□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방위산업 육성 및 방산비리 척결을 위한 정책적·제도적 보완

○ 4차 산업혁명과 연계한 R&D 체계 구축 및 범부처 협업 강화

- * ‘과학기술-국방 정책협의회 (과기부·국방부·방사청)’ 신설 (’18. 3월)
- * 「과학기술기반 미래국방 발전전략」 수립·시행 (’18. 4월)
- * 미래도전기술개발사업 제도 도입 (’18. 9월) 등

○ 방산업체의 안정적인 계획경영 여건 보장 (’19 ~ ’23 국방중기계획에 적용)

- * 방위력개선비 中 국내투자 비중을 80%까지 확대 추진
- * 업체 적정생산능력 고려 무기체계의 연도별 전력화 물량을 균형되게 안배

○ 수출형 방위산업 전환 등 방위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 강구

- * 원스톱 수출지원체계 구축 (’18. 11월), 절충교역 중 부품제작·수출을 30 → 80%로 확대 추진 등
- * 방위산업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장관 주관 「방산업체 CEO 간담회」 최초 실시 (’18. 12월) 및 정례화 (반기 1회) 추진


○ 투명성 제고를 위한 「방위사업법」 전면개정 추진 (법제처 심사 中, 12월)

- * 방위사업 비리·유형 법제화, 가중처벌제 도입 등 제재 실효성 강화
- * 軍·産유착 근절을 위한 방위사업 중개업등록제 확대 및 퇴직자 이력관리제 도입

II. 2019년 업무추진 여건 및 방향

1. 업무추진 여건

- (국제) △힘의 외교 및 자국 우선주의 정책으로 안보 불안정성 심화, 잠재적 위협 점증
△재난, 테러·사이버 등 초국가적·비군사적 위협 증대
- (국내) △남북 간 군사적 신뢰구축, 한반도 평화정착·비핵화를 위한 정부 노력의 추동력 강화 필요
△병역자원부족, 장병 인권보장 및 복무환경 개선 등 국방개혁·국방운영 효율화에 대한 국민적 요구 증대

- 
- ❖ 안보환경의 유동성에 능동적 대처
 - ❖ 정부의 평화정착 노력을 힘으로 뒷받침
 - ❖ 국민의 요구에 적극 부응하는 국방정책 구현 절실

2. 업무 추진방향

- ① 전방위 안보위협에 대비한 **튼튼한 국방태세 확립**
- ② 「9·19 군사합의」 적극 이행을 통한 **남북 간 군사적 신뢰구축**
- ③ **강력한 국방개혁 추진**으로 한반도 평화를 뒷받침하는 강군 건설
- ④ 굳건한 한미동맹 기반 하, 체계적·적극적 **전작권 조기 전환 준비**
- ⑤ 국민과 함께하고,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**사기충천한 軍 문화 정착**

‘국민과 함께, 평화를 만드는 강한 국방’을 구현,
우리 국민들의 삶 속에 **‘평화의 일상화’**를 정착시키고,
국민들의 **대군신뢰도를 제고**

Ⅲ. 주요 업무 추진계획

1 2019년 역점추진 과제

① 전방위 안보위협에 대비한 튼튼한 국방태세 확립

□ 개 요

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토대로 전방위 안보위협을 억제·대응할 수 있는 튼튼한 군사대비태세 확립

□ 세부내용 및 이행계획

○ 긴밀한 정보공유 체제를 기반으로 전방위 위협에 대한 신속대응태세 유지

- * 한미 연합감시태세 유지
- * 다양한 도발·위협 대비 한미 연합 위기관리능력 제고

○ ‘9·19 군사합의’ 이행 간 안정적 군사 상황관리

- 북한의 9·19 군사합의 이행 관련 완벽한 검증체계 유지
- 귀순 등 우발상황에 빈틈없는 대응태세를 확립하고, 발생 가능한 유형별 위협을 상정하여 대응 매뉴얼 보완 발전

○ 잠재적 위협에 대비한 억제·대응 능력 강화

- 우리 해·공역 內 주변국 작전활동에 대한 감시·대응태세 유지
 - * 국제법 허용 범위 內 적극 대응, 우발적 충돌 방지대책 강구
- 군사협력을 다변화하여 국익에 부합하는 전략 환경을 조성하고, 다자안보협의체에 적극 참여하여 국제적 지지 기반 지속 확대

ASEAN Defense Ministers' Meeting - Plus : 아세안확대국방장관회의

- * ADMM-Plus 재난구호연습회의, 아시아안보회의(상그릴라 대화), 서울안보대화 등 국제회의 참가

○ **초국가적·비군사적 위협 대비** 우리 軍의 임무수행능력 강화

- 軍 대테러작전부대 편성과 첨단 장비·물자를 보강
 - * 특전사 대테러작전부대 확대 개편, EOD로봇 등 25개 품목 확보
- 해외 재난 시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한 긴급구호 지원체계 및 국제협력 강화

○ **국방사이버안보 역량 획기적 강화**

- ① 합참 주도 사이버 작전수행체계 구축 ② 사이버 전문인력 양성
- ③ 전·평시 사이버 군사전략 및 작전계획 발전 ④ 사이버 국제협력체계 발전

○ **민·관·군·경 통합방위태세 확립**

- 지자체장 중심의 통합방위작전 수행체계 발전
 - * 제52차 중앙통합방위회의 시행('19.1월), 통합방위 법규 개정 추진('19.9월)
- 테러, 재해·재난 등 국가적 안보·재난 위기 시 유관기관-軍 간 긴밀한 정보공유 및 협력체계 가동, **골든타임** 內 **최소피해로 위기극복**

□ **기대 효과**

- 흔들림 없는 군사대비태세 유지로 정부정책을 군사적으로 뒷받침
- 안보상황 변화에도 軍 본연의 임무완수를 통해
‘강한 안보, 책임국방’ 구현 및 국민의 신뢰·적극적 지지 획득

< 9·19 군사합의 주요 이행현황 >

* 청색 : 완료, 녹색 : 진행, 보라색 : 향후추진

구 분	추진과제	비 고
① 상호 적대 행위 중지	① 지·해·공 적대행위 중지	11. 1일 시행
	② 지·해·공 작전수행절차 적용	11. 1일 시행
② JSA 비무장화 * '남·북·유엔사 3자 협의체' 회의를 통해 협의	① 남북 책임지역 內 지뢰제거	10. 20일 완료
	② JSA 병력·장비 철수 및 감시장비 조정	10. 25일 완료
	③ 비무장조치 관련 상호 현장검증	10. 27일 완료
	④ 공동근무 및 운영규칙 案	협의 중
	⑤ JSA 비무장화 완료행사 및 방문객 자유왕래	협의 중
③ DMZ 內 상호 시범적 GP 철수	① 시범적 GP 인원·장비 철수 및 시설 철거	11. 30일 완료
	② 현장방문을 통한 상호 검증	12. 12일 완료
	③ DMZ 內 쏘GP 철수	추후 협의
④ 남북공동 유해발굴	① 남북 책임지역 內 지뢰제거	11. 30일 완료
	② 유해발굴지역 內 남북도로 개설	12. 7일 완료
	③ 남북공동유해발굴단 편성 (남북 80~100명)	'19. 2월
	④ 본격적 시범 공동유해발굴 추진	'19. 4 ~ 10월
⑤ 한강하구 등 서해 평화수역화	① 한강하구 공동이용 관련 남북공동수로조사	12. 9일 완료
	② 남북공동수로조사 결과를 통한 해도 제작	'19. 1월
	③ 민간선박 자유항행 보장	'19. 4월
⑥ 남북군사 공동위 등 신뢰구축 조치	①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구성·운영	협의 중
	② 軍 주요직위자 (장관, 의장) 직통전화 구축	추후 협의
	③ 평화수역 및 시범 공동어로구역 설정	군사공동위 가동 후 협의
	④ 북측 선박 해주직항로 이용 및 제주해협 통과	
⑦ 남북교류협력 군사적 보장	① 남북관리구역 3통 군사적 보장	지속 이행
	② 철도·도로 협력 군사적 보장	추후 협의
	③ 역사유적 공동조사·발굴 관련 군사적 보장	추후 협의

2 「9·19 군사합의」 적극 이행을 통한 남북 간 군사적 신뢰구축

□ 개 요

한반도 평화정착, 비핵화 실질적 구현을 위한 '9·19 군사합의' 적극 이행

- 지상·해상·공중 적대행위 중지
-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(JSA) 비무장화
- DMZ 內 상호 감시초소 (GP) 철수
- DMZ 內 남북공동유해발굴 추진
- 한강하구 공동이용 보장
- 남북군사공동위 가동 등

* 군사합의의 실효적 조치 이행을 통해 군사적 긴장완화 및 신뢰구축 추동력 확보

□ 세부내용 및 이행계획

- 11.1일부, 지상·해상·공중에서 상호 적대행위 중지 조치 시행 中
 - 안정적 군사대비태세 유지 및 **우발적 무력충돌 방지·차단** 노력 지속 시행
- JSA 비무장화 조치를 통해 남북 간 상호 자유왕래가 가능토록 준비 中
 - **안정적 합동군무초소 운용** 등을 통해 국내·외 관광객 방문확대 및 평화정착 노력 적극 홍보
- 상호 시범적 GP 철수를 통해 DMZ 평화지대화의 첫 단계 조치 이행
 - **DMZ 內 모든 GP 철수 협의** 진행
 - GP 철수에 따른 감시공백 보완 및 대비태세 유지방안 강구 병행
- **'19년 남북공동유해발굴 본격 추진**을 위한 사전조치 이행
 - 남북공동유해발굴단 구성 (~ '19.2월)
 - 공동유해발굴 본격 추진 ('19.4.1. ~ 10.31.)
- 한강하구 민간선박 자유항행을 위한 군사적 보장 등 관련 조치 준비
 - 조사 결과 반영 **해도 제작·배포** ('19.1월), **자유항행 안전조치 마련** 등
- 군사현안 협의를 위한 **'남북군사공동위원회' 구성·운영** 방안 협의 中
 - 차관 (인민무력성 부상) 급을 위원장으로 분기 1회 정례적인 회담 개최여건 마련
 - '평화수역 및 시범 공동어로구역 설정' 등 '9·19 군사합의' 주요사안 이행 협의

- 남북군사당국자 간 직통전화 설치 등 상시 연락체계 구축
 - 軍 주요직위자(국방장관, 합참의장) 간 Hot-Line 구성문제 논의 등
- 남북 교류협력 및 접촉·왕래 활성화 관련 **군사적 보장대책 이행**
 - 유엔사와의 원활한 협조체제 유지를 통해 남북관리구역
통행대책 등 군사적 보장조치 강구

※ '9·19 군사합의'의 충실한 이행을 통해 내년도 한반도의 항구적
평화정착 및 비핵화를 위한 남북 간 군사적 긴장완화·신뢰구축
조치가 본격 추진될 수 있도록 실질적 토대 마련

□ 기대 효과

- 한반도 비핵화 및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추동력 제공
- 한반도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

③ 강력한 국방개혁 추진으로 한반도 평화를 뒷받침하는 강군 건설

□ 개 요

한반도 평화를 뒷받침하는 '강한 군대'를 조기에 구현하기 위해
4개 분야로 구분 (① 군구조 ② 국방운영 ③ 병영문화 ④ 방위사업),
강력한 국방개혁 추진 中

□ 세부내용 및 이행계획

○ 現 정부 임기 內

- 국방운영, 병영문화, 방위사업 분야는 대부분 개혁 완료 가능
- 군 구조 분야는 상당수준 목표 달성

【군 구조】

○ (지휘구조) 한미동맹 기반, **우리 군 주도의 작전지휘체계**를
구축하여 전작권의 안정적 전환여건 조성

- 미래연합지휘구조 개편 (안) 구체화

- * 韓.합참의장의 연합군사령관 겸직 여부 결정
- * '19 연합연습 및 IOC (최초작전운용능력) 평가 시 미래 연합군사령부 편성안 적용
Initial Operational Capability

- 합참 조직 개편

- * 전작권 전환 준비를 위해 「신연합방위추진단」 편제 반영 등
- * 합참 주요 직위자 육·해·공군 균형 편성

○ (부대구조) 병력집약적 구조에서 탈피, **정예화된 부대구조로 개편**

- 육군 : 신속결정작전이 가능한 구조로 개편

- * 지상작전사령부 및 예하 화력여단 창설 ('19. 1. 1.), 기계화보병사단 1개 해체 등

- 해군 /해병대, 공군 : 다양한 위협에 대응 가능한 구조로 개편

- * 해군 / 해병대 : 특수전전단 선견작전대대 창설, 해병연대 → 여단 증편
- * 공군 : 정찰비행대대 (고고도 UAV) 및 전투비행대대 (F-35A) 창설

- 국직부대 : 사이버작전사령부, 정보본부 등 6개 부대 개편

○ (전력구조) 전방위 안보위협 대응은 물론, 국가·사회 요구에 부합하는 **첨단 과학기술 중심 전력구조로 개편**

- 우리 군 주도의 연합방위 능력 보장 및 핵·WMD 위협대응 등 **핵심군사능력** 구비를 위한 **189개 계속사업** 정상 추진
 - * F-35A, 전술지대지유도무기, 패트리엇 성능개량, 장보고-III 잠수함 등
- 우리 군 감시정찰 및 타격 능력 확대를 위해 **8개 신규전력 확보** 추진
 - * 고고도정찰용무인기 (HUAV), 특수작전용무인기, 전술함대지유도탄 (수직형) 등
- 테러, 재해·재난 등 다양한 **초국가적·비군사적 위협** 대응 및 **재외국민 보호**를 위한 능력 보강을 위해 **8개 전력 확보** 추진
 - * 의무후송전용헬기, 대형수송함, 대테러기관단총, 굴절총, 양안형야간투시경 등
- 과학기술 선도를 위해 **4차 산업과 연계된 6개 무기체계 연구개발** 착수, 국내 방위산업 육성을 위한 **국내투자 비중 안정적 유지**
 - * 다출처영상융합 체계, 수중자율기뢰탐색체, 레이저대공무기 등
- 육군의 미래 지향적인 군구조 개편 추진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**19개 전장기능별 필수전력 확보** 추진
 - * 사단UAV, K-2전차, 차륜형장갑차, 한국형기동헬기, 230밀리급 다련장 등

○ (병력구조) **상비병력 감축 불구**, 즉응대기 부대의 완전성 제고, 전투부대 간부보강, 예비전력 내실화를 통해 **실제 전투력은 강화**

- 상비병력 감축 : 59.9만 명 → **57.9만 명** ('22년 50만 명 수준)
- 「즉응대기 부대」 최우선 보강 : 상황조치 및 작전, 정비 조직 등
 - * 군무원 등 민간인력 4,736명 증원하여 행정부대로 보충, 행정부대 현역은 야전 전환
- 과학화 예비군훈련장 설치 (7개소), 예비역 평시 복무제도 방안 마련
- 여군인력 확대 : '18년 11,400명 (6.2%) → '19년 12,495명(6.7%) * '18년 대비 + 1,095명 (장교 400명, 부사관 695명)
- 장군 정원 조정 : 436명 → **405명** ('22년 360명)

【국방운영】 4차 산업혁명 첨단기술 활용과 국민참여의 개방형 체제 확대를 통해 고효율의 **선진화된 운영체제 구현**

○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과학기술을 활용한 군사능력 및 운영체제 발전

- 병력절감과 전방위 위협에 동시 대비할 수 있는

첨단·과학화된 군사능력 보장

* 무인감시정찰 체계, 유·무인 복합전투체계, 블록체인 기반 비밀관리체계 등

- 교육훈련·병영환경 등 국방운영 전반에 ICT 신기술을 적용, 고효율의 **선진 국방운영 실현**

* 지능형 과학화훈련체계, 빅데이터 기반 운영 분석으로 스마트병영 구현

- 국방 혁신 실행력 제고와 추동력 확보를 위한 **미래지향적 기반 인프라 조성으로 4차 산업혁명을 선도**

* 초연결 네트워크, 선제적 규제개혁, 미래국방 R&D 역량 보유 등

○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군사시설 조성

- 국민의 편익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軍 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**해·강안 경계철책 철거·대체**

* '19년 33km 철거 ('20년까지 총 170km 철거·대체 예정)

- 국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지역개발 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**유휴 국방·군사시설 정리·개선**

* '19년 3,300여 동 철거 ('21년까지 총 8,300여 동 철거 예정)

-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면서 지역주민의 재산권 보장과 불편 해소,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**군사시설 보호구역의 합리적 규제완화 지속 추진**

* '18년 약 350 km² 여의도 면적 116배 해제

- 과거 軍이 긴급한 군사목적으로 불가피하게 **무단 점유한 사·공유지 정리**를 통해 **국민의 재산권 보호**

* 측량 완료 : '18. 3. ~ 11월, 토지 소유자 통보 : '18. 12월

매입, 사용료 지급, 교환 등 : '19. 1월 ~

○ 국민 참여와 소통을 통한 **개방형 국방운영체제**로 전환

* 청렴국방 민·관협의회 운영, 청렴사회협약 체결 등 부패방지 체계 구축

【방위사업】 효율성·투명성·전문성의 **국제 수준 경쟁력 확보** 관련
제도 지속적 보완

○ **민간 및 기업 중심의 방위산업 성장 토대 마련**

- 업체 주관 무기체계개발을 확대, 정부는 비닉·핵심기술에 집중
 - * 진화적 획득 활성화 및 사업중간점검제도 구체화 (방위사업관리규정 개정, '19. 1월)
- 전문·기술적 업무(원가산정·기술관리 등)의 민간 아웃소싱 확대
- 5G·드론 등 4차 산업혁명기술 중심 민군협력사업 확대 ('19년 670억 원)

○ **수출형·역동적 방위산업 육성**

- 수출개조, 국산화 등 수출경쟁력 제고사업 확대
 - * '18년 244억 원 → '19년 480억 원
- 중소·중견기업 판로 확보를 위한 한국형 Buy Korea 제도 도입
 - * 무기체계 국외도입 시 국산부품 적용 의무화 (국산부품 쿼터제)

○ **도전적·창의적 국방 R&D 체계 구축**

- 성실수행인정제도 점진적 확대, 협약 도입 등 도전적 연구환경 조성
- 미래국방기술 개발을 위한 국가 및 민간역량 결집
 - * 「미래국방 기초원천 R&D 전략」 수립 (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, '19. 3월)

□ **기대 효과**

- 주요 개혁과제 조기 시행으로 흔들림없는 개혁 추진의 기틀 마련
- 소통 강화를 통해 국방개혁 추동력 확보 및 지지기반 확대

4 **굳건한 한미동맹 기반 하, 체계적·적극적 전작권 조기 전환 준비**

□ 개 요

대한민국의 국력·군사력에 걸맞은 책임국방 실현이라는 국민적 요구에 부응, **한국군이 주도하는 한미 연합방위체제를 구축**

□ 세부내용 및 이행계획

- 한국군의 전구작전 주도능력을 구비하기 위해 **‘미래지휘구조’를 적용한 1단계 (최초작전운용능력) 한미 연합검증 시행**

- 검증시기 : '19. 8월 (잠정)
- 검증대상 : 미래 연합군사령부 및 예하 연합구성군사령부
- 검증 중점
 - 한미가 합의한 연합임무수행 필수과제 수행능력
 - 미래 연합군사령부의 편성 및 운용의 적절성 등

※ 全軍의 노력을 집중, '19년 최초작전운용능력 (IOC) 평가 준비 철저

Initial Operational Capability

- **전작권 전환과 연계한 한미 연합연습·훈련 시행 (협의 중)**
 - 연합 지휘소연습은 전·후반기 각 1회 실시, 후반기는 IOC평가와 병행
 - 연합 야외기동훈련은 규모를 조정해서 연중 실시
- 전작권 전환 조건 충족을 위한 **군사적 능력 (조건 #1) 및 동맹의 포괄적 北 핵·미사일 대응능력 (조건 #2) 확보** 노력 지속
 - 매년 조건 #1·2 능력 확보상황에 대한 한미 공동평가를 기초로, 전환조건 조기 충족을 위한 노력 가속화

- **한반도 및 역내 안보환경 (조건#3) 평가** 시 남북 간 군사적 긴장완화, 북한 비핵화 조치 등 변화요소를 반영한 **한미 공동평가 추진**
- 연합구성군사령부의 상설 운영을 위한 **연합검증 시행** (전·후반기)
 - * 대상 : 연합지구사, 연합해구사, 연합공구사, 연합해병대사
- 전작권 전환 이후 연합방위 및 위기관리체제를 규정하는 **근거문서* 초안 완성** ('19년 8월 한)
 - * 관련약정 / 전략지시 3호, 전작권 전환 이후 동맹위기관리 합의각서 등

□ 기대 효과

- '19년에 최초작전운용능력을 확보한 이후 완전임무수행능력을 조기에 구비할 수 있는 토대 마련
- 연합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우리 軍의 능력을 평가하고, 국방개혁과 연계하여 실질적인 보완
- 한미 간 긴밀한 조율 下 연합검증을 실시함으로써, 굳건한 연합방위태세 유지 및 안정적 전작권 전환 여건 조성

5 국민과 함께하고,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사기충천한 軍 문화 정착

□ 개 요

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장병 인권보장, 복지 증진, 복무여건 개선으로 국민과 함께하고,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사기충천한 병영문화 조성

□ 세부내용 및 이행계획

○ 장병 인권보장

- 국가인권위원회 內 軍 인권보호관 설치·운영, 영창제도 폐지, 군기교육제도 시행
- 軍 사법제도 개혁
 - * 항소심 민간이양 및 지역군사법원 운영 준비 ('20년 시행 예정)
 - * 軍 內 범죄피해자에 대한 국선변호사 지원 등
- 종교 또는 개인적 신념 등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방안 마련 ('20년 시행)
- 軍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 활동 지원
 - * 軍의문사 진상 규명 및 명예회복 요구에 적극 응답하여 국민의 신뢰 회복
- 인격 및 생명존중문화 확산을 위한 콘텐츠 개발 및 활용
 - * 자살예방교육 콘텐츠 제작 활용 및 「병영언어 순화」 웹툰 제작 활용

○ 장병 복지증진

- 초급 및 기혼간부 주거여건 개선 ('19년 초급간부용 4,252실 확보)
 - * 권역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주거지원을 위해 기존 주거시설을 개선
 - * 직접 건립 위주의 공급방식을 전세대부제도 등 민간주택을 활용한 방식으로 전환
- 병영생활관 현대화 추진 (~ '26년 완료)
 - * 노후된 병영생활관 등 기존 소요 (1,712동) 외 추가 소요 확인, 현대화 추진
- 복지회관 관리병·軍마트 현역병 등 전투근무지원분야 민간인력 전환
 - * 청소·제초·제설 작업 등 민간인력 확대 등
- 軍 특수성이 반영된 수당 등 직업군인 처우개선

○ 장병 복무여건 개선

- **평일 일과이후 병사 외출제도** 활성화 및 **휴대폰 사용 허용**
 - * 시범적용 확대 결과에 따른 보완소요 강구 후 전면 허용 검토
- 생산적 軍복무를 위한 자기개발 여건 보장
 - * 사이버지식정보방 여건 개선, e-러닝 학습콘텐츠 제공 확대
 - * 국가기술자격 軍 內 검정을 통한 자격 취득 여건 보장 (응시료 지원 등)
- **軍 의료시스템 개편**으로 민간 수준의 진료 기회 제공
 - * 소방청 (119 응급구조 등) 과 협력을 통해 응급환자 처치 및 후송능력 강화
 - * 무자격자에 의한 의료보조행위 근절을 위해 의무인력 총원 (1,104명)
 - * 국군외상센터 운영 준비 및 국군수도병원 보강
- 공상 간부 민간병원 진료 시 **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담금 보장**
 - * 軍병원에서만 아니라 민간병원 진료 기회 부여
- **공상 병사 완치 시까지 전역을 보류**하고 치료비를 지원
- 제대군인 지원 및 참전용사 예우 강화
 - * 취업상담·교육, 취업활동 지원 및 전직교육원을 운영하여 전역 후 취업 지원

□ 기대 효과

- 획기적인 장병 복무여건 개선 및 선진병영문화 창출을 통해
실질적 강군 육성 및 국민에게 신뢰받는 軍으로 변모

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도입

□ 개 요

헌법재판소 결정 ('18. 6. 28.)에 따라 종교·개인적 신념 등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에 대한 **대체복무제 도입 추진**

*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 종류 조항(제5조)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여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하며 '19. 12. 31. 까지 한시 적용

□ 추진 경과

- 국방부는 국민적 관심과 정책적 중요성을 고려하여 관계부처 실무추진단 및 민간 자문위원회 구성·운영
 - (실무추진단) 국방부·법무부·병무청 (단장 : 인사복지실장)
 - (자문위원회) 인권위, 학계 및 시민단체 민간 전문가
- 양심적 병역거부 당사자 및 변호인 면담을 통해 도입방안 관련 의견 청취
- 교정·소방·보건·사회복지 시설 등 현장 방문을 통해 **복무 강도** 및 **합숙시설 보유 여부** 확인, 대체복무자 배치에 대한 기관의견 수렴
- 폭넓은 의견 수렴을 위하여 **간담회·공청회** 등 실시
- BH 회의,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, 당·정·청 회의 등을 통해 추진상황 지속 점검

□ 정부 추진단 검토 '안'

- 기본 방향
 - 대체복무 방안은 **병역의 형평성**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**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**되지 않도록 엄격하게 설계
 - 안보태세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국제인권기구 권고사항 등 **국제규범을 최대한 존중**

○ 복무기간

- (1안) 현역병 (육군 18개월, 해군 20개월, 공군 22개월), 산업기능요원·공중보건의사 등 다른 대체복무자(34~36개월)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**36개월**로 설정
 - (2안) 국제기구 권고 고려, 육군 병의 1.5배인 **27개월**로 설정
- ※ 제도정착 후 일정기간 범위에서 조정 가능토록 법률안 마련

○ 복무분야

- (1안) 합숙시설이 갖춰져 있고 軍복무 환경과 가장 유사한 **교정시설로 단일화**
 - * 지뢰제거 등 軍 관련 업무는 △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의 수용성 △헌재 결정 취지 △제도 도입의 실효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는 점을 고려 제외
 - (2안) **교정·소방으로 복무기관 다양화**
- ※ 제도정착 후 복무분야 확대 가능토록 법률안 마련

○ 심사위원회

- (1안) 부처 업무소관상 **국방부에 설치**, 위원은 인권위·법무부·국방부에서 균형되게 추천하고 위원장은 호선하도록 하여 심사의 독립성을 보장
- (2안) **국방부가 아닌 기관에 설치**, 독립성·공정성 확보

□ 장애요인 및 대응방안

- (장애요인) 대체복무 도입방안에 대한 의견차가 매우 큰 상황으로, 사회적 갈등 우려
- (대응방안) 정부안이 '양쪽 의견을 균형있게 반영한 대안'이라는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, 불필요한 갈등이 유발되지 않도록 이슈관리 노력

□ 향후 조치계획

- 정부안 발표 및 입법예고 : **'18. 12월 말**
- 법령 제·개정, 시행 준비 (심사위원회 구성 등) : **'19년**
- 시행 : **'20. 1. 1.**

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 적용, 스마트국방 혁신 추진

□ 개 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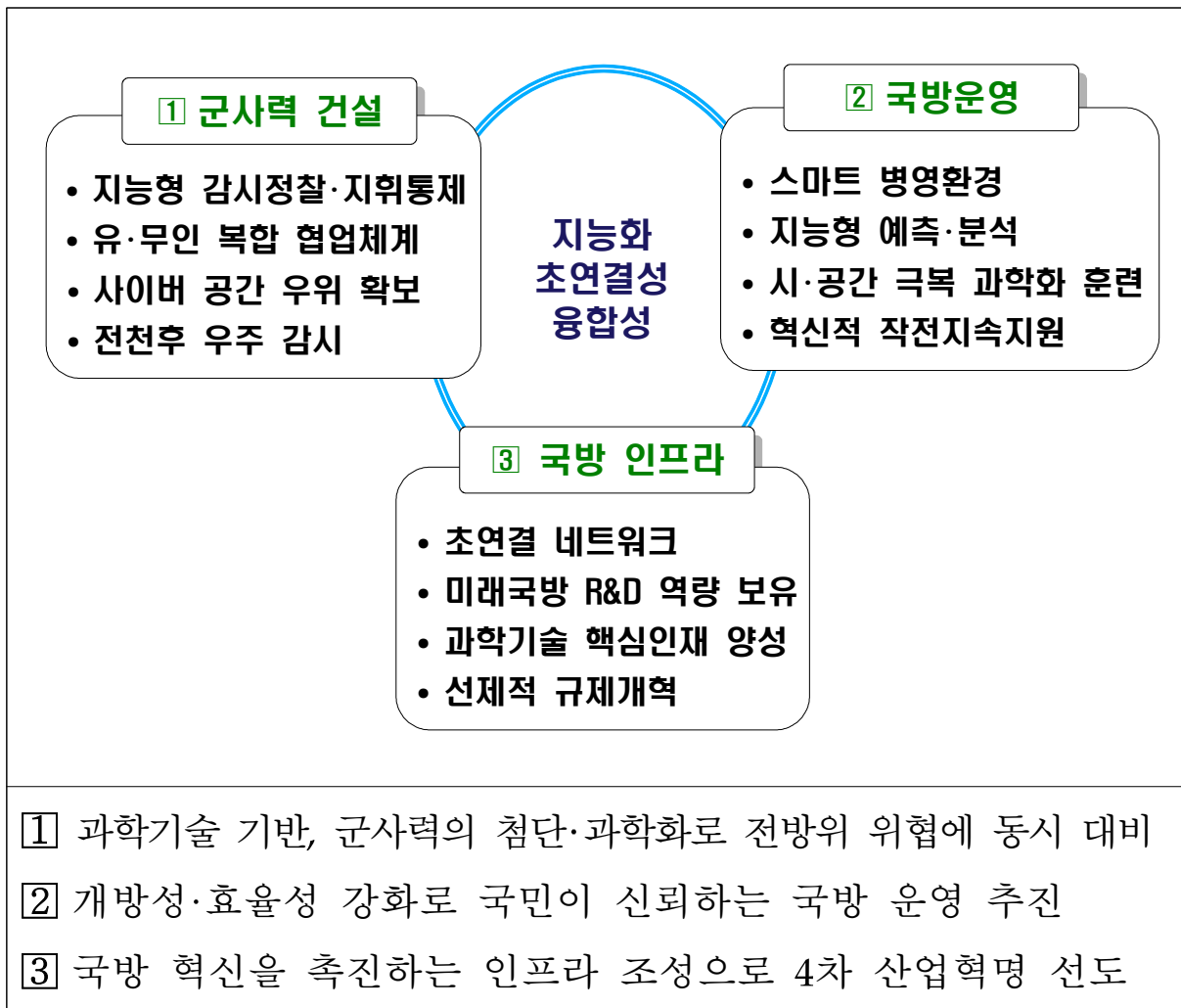
○ 4차 산업혁명 지능·융합화를 통한 **국가 혁신 국정과제 구현**

○ 국방개혁 2.0과 연계, **군사력의 첨단·과학화 건설**과
국방운영 효율화 촉진

* 軍 병력 감소, 국민적 눈높이에 부응하는 국방운영의 질적 개선 요구에 대응

□ 세부내용 및 이행계획

○ 기본방향 : 과학기술 기반 국방혁신으로 스마트하고 강한 군대 건설



○ 이행계획

- 국방부 주도 하, 합참·방사청·각 軍 본부 등 **국방관련 기관과 정부 관련부처를 포함한** 추진체계 구축
- 전략 부합성 (국방개혁 2.0 구현 등) 과 기술수준을 고려 **단기, 중·장기과제로 구분**하여 추진

단기 중점과제 (~ '23년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군사력 건설 : 지능형 무인감시정찰 체계 등 9개 사업 · 국방운영 : 빅데이터 등 신기술 활용 수리부속·장병관리 등 선제적 상황파악 및 보완 개념으로 완전 전환 · 과학화훈련체계 :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어떤 훈련도 가능한 실감형 교육훈련 완성
중·장기 전략과제 ('23년~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군사력 건설 : 유·무인 복합전투체계 등 15개 사업 · 국방운영 : 지능화된 시설·장비로 최적화된 스마트 병영 환경 구축
역량 강화과제	· 고에너지 무기, 고출력 레이저 무기체계 등 미래 신기술 개발 과제

- **민간 첨단기술의 軍 적용**을 통한 유용성 검증 결과를 다시 민간으로 환류

							정부 4차 산업대응계획	국방부 추진계획
구분	'18 (국가기술)	'19	'20	'21	'22	'23~	적용분야	
무인이동체 (드론 기준)	85%	동력원 등 핵심기술 개발			기술검증·전투실험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드론봇 전투체계 · 공중 무인전투체계 	
사물인터넷	87.7%	각종 디바이스, sw개발			지능형 경계시스템 개발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무인 감시정찰체계 · 스마트 부대 	
가상현실	82.5%	가상현실 연구개발 지원			모의훈련 개발, 합성훈련체계 구축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실가상화 지능 훈련체계 	
무선통신 (5G)	92.3%	5G 시범사업			초연결 광역통신망 구축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AI기반 초연결 지능전투체계 · 초연결 광역통신망 	
인공지능	81.3%	차세대 기술 개발			정보유출 탐지 및 예측체계 개발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초연결 지능형 지휘통제 · AI기반 사이버 위협 대응 	

↳ 기준 : 해당분야 최고 기술보유국

- * 정부와 민간의 과학기술 역량을 **총체적으로 결집·활용 (Spin-On)**하여 국방R&D만으로 확보하기 어려운 **혁신적 국방기술 확보**
- * 국가R&D에서 확보된 新기술을 **국방 분야에 조기에 적용·실증**하는 동시에, **민간으로 확산 (Spin-Off)** 할 수 있는 체계 구축

- 교육훈련, 병영·군수관리 등 국방 전반에 인공지능 등의 **新기술을 적용, 업무프로세스를 혁신**
- 혁신 친화적인 기반 마련을 위해 **과도한 규제·관행을 개선**
 - * 적시적으로 미래지향적 新기술의 軍 분야 적용을 위해 관련 규제를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

□ 기대효과

- 군사력의 첨단·과학화로 **현존·미래 전방위 다양한 위협에 대응**
 - 전투원의 **첨단화**(위리어 플랫폼), **기동화**, **지능화된 의사결정 지원**
 - 유·무인 복합전투체계를 통한 **병력절감형 전력 첨단화**
-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어떤 훈련도 가능한 **과학화 훈련체계 구축**
 - * 과학화훈련 체계를 실제·가상훈련 환경으로 통합하여 훈련여건 제약 요소 극복 (실기동 모의훈련 - 가상·위게임 모의훈련 - 실 지휘통제시스템 활용 연계 훈련)
- 초연결 네트워크로 **국방자원을 “신경망과 같이 연결”**
 - 5G기반 무선통신 서비스로 **첨단 ICT 적용** 여건 구비
 - 클라우드 기반 국방 데이터 통합으로 **데이터 관리의 효율성 증진**
- 인공지능 기반 지능형 분석체계로 **작전지속지원의 생산성·효율성 증대**
 - 빅데이터 기반 수리부속·정비 수요예측으로 **혁신적 군수지원**
 - 인공지능 등 新기술 기반 각종 장비 관리, 국방운영 상황 관리 등 **국방예산 효율적 사용**
- 장병들이 체감할 수 있는 **병영생활 여건 개선**
 - 웨어러블 기기를 통한 장병 건강관리 등 **스마트 병영 환경 구축**
 - 이동 원격진료체계를 통한 골든타임 확보 등 **최상의 의료 지원**

IV. 결 언

□ **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지금까지 우리 軍은**

- 확고한 국방태세를 유지, 정부정책을 힘으로 뒷받침
- 국방개혁 기본계획을 완성, 정예 강군 육성의 발판 마련
- 「9·19 군사합의」 체결·이행을 통해 남북 간 긴장완화를 실질적으로 견인하는 등의 성과를 달성

□ **이를 바탕으로 '19년에 우리 軍은**

- 전방위 안보위협에 대비한 튼튼한 국방태세를 확립
- 「9·19 군사합의」 실효적 조치를 충실히 이행하여, 남북 간 군사적 신뢰구축의 추동력을 확보
- 한반도 평화를 뒷받침하는 강군 건설을 위해 국방개혁을 강력히 추진
- 한국군이 주도하는 연합방위체제의 구축을 위해 체계적·적극적으로 전작권 전환을 준비
-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병영문화를 정착시키는데 매진함으로써,

□ **‘국민과 함께, 평화를 만드는 강한 국방’을 적극 구현해 나가겠습니다.**

붙임#1 2019년, 이렇게 바꾸겠습니다.

분 야	현 행 (2018년)	달라지는 사항 (2019년)
국방예산	▶'18년 국방예산 : 43조 1,581억 원	▶'19년 국방예산 : 46조 6,971억 원 - 전년 대비 : 8.2% 증가 - 방위력개선비 비중 32.9% (방사정 개정 후 최고수준)
9·19 군사합의 이행을 통한 남북 간 군사적 신뢰구축	▶판문점 공동경비구역 (JSA) - 지뢰제거·화기·철수 등 비무장화 조치 협의	▶판문점 공동경비구역 (JSA) - JSA 內 남북 합동경비근무 시행 - 관광객 및 참관인원 자유왕래 확대
	▶DMZ 內 감시초소 (GP) - 상호 시범적 GP 철수 (11개)	▶DMZ 內 감시초소 (GP) - 쏘 GP 철수 협의 추진
	▶DMZ 內 남북공동유해발굴 (화살머리고지 일대) - 지뢰제거·도로개설 완료	▶DMZ 內 남북공동유해발굴 (화살머리고지 일대) - 남북공동유해발굴단 구성 (~2월) - 본격적인 공동유해발굴 작업 시행 (4 ~ 10월)
	▶한강하구 공동이용 군사적보장 합의 - 남북공동수로조사 완료	▶한강하구 공동이용 군사적보장 시행 - 민간선박 자유항행 보장 추진
	▶남북군사공동위원회 - 군사공동위 구성·운영 합의서 마련	▶남북군사공동위원회 (가동) - 본회의 및 분과위 주기적 개최
부대구조 개 편	▶육군 1·3군사령부, 지상작전사령부 창설 준비 * 지상정보단 창설 ▶육군 기보사단 6 → 5개 ▶공군 F-35A 1개 대대 창설 ▶국직 기무사 해편,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창설	▶육군 1·3군사령부 통합, 지상작전사령부 창설 * 화력여단 창설 ▶육군 기보사단 5 → 4개 ▶공군 F-35A 1개 → 2개 대대, 위성감시통제대 창설 ▶해군 선견작전대대 창설 ▶전비태세검열단 합참 전환 등 국직부대 (6개) 추가 개편
주요전력 증강	▶신규 전력화 - 공중급유기, 패트리엇 성능개량 등	▶신규 전력화 - 고고도정찰용무인항공기, 의무후송전용헬기, F-35A 등
	▶추가 전력화 - 상륙함-II, 장보고-II, 한국형기동헬기 등	▶추가 전력화 - 공중급유기, 한국형기동헬기, 중거리지대공유도무기 등

분 야	현 행 (2018)	달라지는 사항 (2019)
장병인권존중의 복무여건 개선	<p>▶ 軍 의료서비스 개선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공상 병사 전역 후 6개월까지 치료비 지원 (6개월만 전역보류) - 무자격자 의료보조행위 잔존 	<p>▶ 軍 의료서비스 개선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공상 병사 완치 시까지 치료비 지원 (완치 시까지 전역보류) - 무자격자 의료보조행위 근절 * 의무군무원 886명 채용
	<p>▶ 軍 의문사 진상규명 및 근원적 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발족(9월) - 수사권 : 사고부대 헌병대 	<p>▶ 軍 의문사 진상규명 및 근원적 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軍 內 사망사고 발생시 국선변호인 지원 - 수사권 : 국방부 또는 각 軍 본부
장병복지 및 처우 개선	<p>▶ 병 휴가·전역여비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숙박비 : 18,000원 - 선박비(50해리 이상) : 31,600원 	<p>▶ 병 휴가·전역여비 인상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숙박비 : 25,000원 - 선박비(50해리 이상) : 41,080원
	<p>▶ 유급지원병 보수 (유형 1 기준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月 : 182만 원 	<p>▶ 유급지원병 보수 인상 (유형 1 기준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月 : 245만 원 (+63만 원)
	<p>▶ 당직근무비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평일 5천 원, 주말 1만 원 	<p>▶ 당직근무비 인상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평일 1만 원, 주말 2만 원
	<p>▶ 병사 피복 보급 기준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춘추운동복 (1벌) - 동계 점퍼 미보급, 아전상으로 대체 활용 中 	<p>▶ 병사 선호 피복류 보급 확대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춘추운동복 (2벌) - 육군 전방부대, 해군·해병대 서북도서 부대, 공군 방공·관제부대 패딩형 동계점퍼 보급 (70억 원)
	<p>▶ 공기청정기 보급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육군훈련소 생활관 內 보급 (1,400대 / 4.3억 원) 	<p>▶ 공기청정기 보급 확대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쏘 병영생활관 보급 (367억 원)
	<p>▶ 급식 혁신 시범사업 시행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△ 주말 브런치 (연 1회), △ 병사식당 외 급식 (연 1 ~ 2회), △ 복수·자율메뉴 편성 등 	<p>▶ 급식 혁신사업 전군 확대시행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△ 주말 브런치 (연 2회), △ 병사식당 외 급식 (연 4회), △ 복수·자율메뉴 편성 등 - 부대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시행
	<p>▶ 동원훈련 보상비 (1.6만원)</p>	<p>▶ 동원훈련 보상비 인상 (3.2만원)</p>
여군 비중 확대 및 근무여건 보장	<p>▶ 여군 비중 확대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6.2% (11,400명) - 초임획득 : 1,537명 	<p>▶ 여군 비중 확대 (지속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6.7% (12,495명) (+1,095명) - 초임획득 : 1,832명 (+295명)
	<p>▶ 軍 어린이집 (133개소)</p>	<p>▶ 軍 어린이집 확충 (137개소)</p>

